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탈출을 위한 소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고 승 한

I. 신자유주의 수정인가 혹은 종언인가?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세계시장경제 질서는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 최근에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탈규제, 시장개방, 작은 정부, 기술과 시장의 우상, 민영화의 확산,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 자유무역협정의 강화(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본주의식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을 지속해 왔으나 '자본주의 모델과 신화'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획기적 변화와 위기 결과는 기존 신자유주의 질서에 심각한 문제와 역효과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의 논리 강조는 소위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경제원리가 지배하게 되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 조직, 기업, 국가는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즉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개인에서부터 국가 간에도 더욱 심화되는 형상으로 귀결되어 경제적·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천해 왔던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은 이제 폐기돼야 할 '낡은 이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주장들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주의자들은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모델에 수정을 가하고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장점(자율, 투자활성화, 무간섭, 경쟁을 통한 개인 및 지역 역량의 극대화 등)을 충분히 살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도하였던 신자유주의 그룹에서도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결정주의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발전모델이 안겨준 피해와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필자는 최근 세계의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간의 상호 관계를 논외로 하고자 한다. 대신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공황의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져 온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짚어보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현단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

1. 고용없는 성장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경제는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고용없는 성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1998년의 외환위기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고용없는 성장 추세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경제적 잉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가능한 한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기술 및 기계(특히 컴퓨터, 로봇 등)로 대체하려고 한다.

사실상,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생산기술력 발전의 결과로 노동기술 수준의 탈숙련화를 촉진시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한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기업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용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시기와 2003년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거쳐, 2007년에 1.2% 증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007년에 보여준 1.2% 고용증가율은 1998년, 2003년처럼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0.31% 증가한다는 고용탄력성은 2007년에는 0.24로 감소하였다. 즉 2007년에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0.24% 증가하여 10년 전에 비하여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충남대학교 중소기업정책 연구소, 2008).

물론 2000년 이후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률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취업자들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2005년 전체 취업자는 92만5000명이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는 70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영세 도·소매업 종사자수가 경기침체로 폐업하여 비정규직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은행, 2008).

결국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고용이 정규직에서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더욱 많이 종사하게 되는 고용의 질적 악화가 일어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증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충분담 차원에서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주는 가능한 한 근로자를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혹은 정규직 종사자를 비정규직화하여 기업의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려나가는 이유는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노동통제의 수단을 더욱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근무환경, 사회보험, 퇴직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기업이 고용여건이 나빠지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선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욱 확산되어감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2001년 8월에 737만명에서 2007년 3월에 879만명까지 계속 증가해 오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8월 840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에 따라 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8월에 52.1%를 차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도 장기임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는 증가하였다. 더구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9.9%이고 시간당 임금은 50.6%로 나타났다. 이런 임금 불평등 정도는 5.14배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2년이 되어가도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예컨대, 임금, 승진, 정규직화,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등) 개선과 관련하여 획기적 변화는 없고,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실물경제 위기와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이 오히려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없는 성장속에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양산은 근로자들의 중산층으로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고 그 진입 장벽을 더욱 높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사회적 통합에도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가구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저축과 소비위축으로 나타나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최근에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계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의 침체속에서 기업 생존과 경제회생이라는 명분하에서 친기업 정책과 국가-자본연합의 강화는 결국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3. 사회양극화 심화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경기침체와 기업도산으로 인한 불안정 고용은 가계소득의 불안정을 압박하게 되는 등 노동자가 해고되면 바로 실업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강화는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산업부문은 물론 지역과 개인에게 빈부격차의 증가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장경쟁과 지배가 강화될수록 시장에서 퇴출된 사회

적 약자는 더욱 늘어나 소득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세계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가 대외경제여건의 호조(예컨대, 환율의 안정화, 저유가 등)속에서 수출호황을 누리며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와 외형적으로 경제성장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내수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서울 중심의 수도권 및 상류계층은 나아졌으나, 반면에 중소기업, 지방, 자영업 및 취약계층은 오히려 더욱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현실에 내몰리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8년 정부가 파악한 전국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족 기준 132만원) 계층은 540만명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53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나머지 약 380여만명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여 빈곤층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된 '신빈곤층'과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이 소득상실, 실직, 폐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문에 과감한 공공재정투자가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빈곤층의 확대재생산은 결국 빈곤층의 악순환 고리와 연결되어 커다란 정치·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확대, 소득상위 계층의 소비촉진, 해외자본의 유치증대 등을 촉발시켜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역력하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청(2009)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가구(2인 이상)를 10개 계층으로 구분할 때 소득 증가율은 상위 10%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증가율은 가장 낮은 0%대에 그쳤다. 또한 소득상위 10%계층의 소비성향(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8.5%로 전년(61.0%)보다 1.5%p 낮아지면서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소득하위 30%계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지출이 동시에 감소하였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계층에 해당되는 고소득층의 적자가구 비율은 낮아져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경향신문, 2009. 2. 28).

이처럼 정부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과감하게 시행한 감세정책이 민간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대했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매우 힘들어 지고, 특히 비정규직·일용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소득불안정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하락과 고용률 둔화는 소비위축과 기업의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불황 시대에는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사회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실업, 사회적 불만 및 불안, 다양한 사회갈등 등이 국가·사회적 통합의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청년실업의 확산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실업문제는 서민경제에서 꼭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이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실물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으로써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실업대책들을 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국내 경기의 급속한 침체 및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공장의 폐업, 기업의 구조조정, 투자위축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2009)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2005년 3월(4.1%) 이후 4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업자수가 지난해 말 78만7000명에서 올해 2월에 92만40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가운데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불안,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 일자리 창출의 미흡 등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실업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청년층 고용사정의 악화와 실업 급증은 개인, 세대, 지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15~29세의 청년 실업자는 35만6000명이고, 또한 20대 실업율이 2008년 9월에 6.0%, 10월 6.7%, 11월 6.6%, 12월 말 7.0%, 그리고 2009년 1월에 7.7%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08년 9월에 4만9000명 감소하였고, 10월 13만명 감소, 11월 13만3000명 감소, 12월 말 12만8000

명 감소, 그리고 2009년 1월에 19만9000명 감소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11월에 62.9%에서 2009년 1월에 61.8%로 1.1%p 감소하여 1988년 2월에 61.3%를 차지한 이후 최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세대간 갈등과 통합의 위기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향후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보다 다각적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III.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탈출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과 지역사회가 동시에 시련을 겪고 있다. 먼저 거시적 차원의 세계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지배로 나타난 금융자본주의 역효과와 폐해로 말미암아 국가 및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

사실상,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고, 동시에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간으로서 일할 권리와 노동의 존엄성이 위협받게 되는 형국이다.

노동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직장을 얻어 노동에 참여

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 종사 근로자는 고용불안 및 소득불안정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저하(임시·시간제 고용 형태)에 직면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규모의 경제, 규제완화, 민영화, 무한경쟁, 작은 정부, 개방경제, 자유무역 등 강조)의 강화는 사회양극화 현상(예컨대, 빈곤층, 실직자,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사회갈등·불평등, 중산층의 붕괴 등의 문제)을 초래하여 그 폐해가 개인, 지역, 세대 및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로 신빈곤층이 생겨나고, 또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실업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회적 위기의 시대에 모든 사회주체들이 함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식적 노력과 의지들이 모아지고 이를 사회적 힘(Social forces)과 역동성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소위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승자독식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를 함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반드시 수정되거나 혹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실물 및 자본시장의 경쟁원리와 기술혁신 등)를 창의적이고 민주적 실천 방법을 통해 잘 활용해 나간다면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과 자본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적 노력들을 강구해 나가야 시점이다. 물론 미시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가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화라는 복지정책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정책적 실천 접근과 방법들은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 오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수준에서 확산되는 경제공황 시대에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 모델이 낳은 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투자 정책을 과감히 전개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시장경제 체제 작동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정직성 등에 바탕을 둔 협력과 신뢰가 구축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의 개인, 조직,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사회적 연대와 통합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위기탈출의 원동력과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도덕경제(신뢰, 정직, 투명, 나눔과 헌신, 기부 등)의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나갈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지향의 실천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로운 발전과 나눔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시장경제의 운용이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올바른 운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개인 및 기업의 창의적 활동 보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이 제도화되는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이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확립하여 이를 준수하는 법치주의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부문은 자본과의 연합에 머물지 말고 노동부문과 연합도 동시에 구축하여 '국가-자본-노동' 간의 연합으로 정치·사회적 안정 기반을 하루속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고용보장 등 복지여건의 질적 개선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가 온전히 지탱하려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시행되는 사회·경제정책이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정파, 인종, 종교 등을 위하고 있다면 그러한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은 반드시 공공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정책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유착, 부패, 비리, 불법·탈법 등이 근절되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개인, 조직, 기업,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부문이 동참하는 사회적 참여 및 연대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 사회적 소통이 자연스레 작동하여 여론형성과 수렴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정당성으로 악용되는 편견, 이념,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분열과 파당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부문이 공동체(Community without unity) 정신 함양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선(Public goods)의 실천 방법으로 사회적 헌신, 나눔과 기부 등에 동참하는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경향신문 2009. 2. 28
2.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 ____ (2008). 「근로자 가구당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
4. ____ (2009). 「2008년 가계동향」
5. ____ (2009). 「3월 고용동향」
6. 통계청. KOSIS. 각 년도.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사회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8. 충남대 중소기업정책연구소(2008) 「대전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안)」